

DDA농업협상, 어떻게 돼 가나?

절충 통해 급진전 '개도국지위' 유지 관건

개방폭 최소화, 민감품목 관세감축 혜택보다 개도국지위 유지가 관건
주요국 동향파악 및 막후접촉 통해 협상흐름 잡고 신속적 전략 중요



지난 7월말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감축의 구체적인 세부원칙(modality)의 초안 마련에 실패한 이후 잠잠하던 도하개발 아젠더(DDA) 농업협상이 최근 주요국간의 의견 절충으로 급진전 되는 분위기이다. 9월 중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통상장관 및 농업장관들이 워싱턴과 파리에서 연이어 만나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핵심 쟁점에 관하여 입장 절충에 들어갔다.

특히 관세감축과 민감 품목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으며, 또 그 결과는 사실상 농업 협상을 이끌어 가고 있는 주요 4개국(Quad: 미국, 유럽연합, 인도, 브라질) 각료회의와 주요 5개국(FIPs: 주요 4개국에 호주가 추가됨) 고위급 실무회의를 통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주요 4개국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감축수치를 담은 제안서를 배포하면서 민감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절충을 시도하고 있어 향후 이 결과에 따라 세부원칙 최종 도출을 목표로 하는 12월에 열릴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제6차 각료회의(홍콩)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EU’ 협상주도권 쟁탈 치열

농업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 4개국들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각료급 회동을 통해 서로간의 입장차를 좁히는 타협을 시도하였다. 주요 4개국 각료급 회의에서는 협상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줄다리기가 이어졌으며, 아울러 농산물 수출개도국을 대표하는 브라질,



인도 등 G20이 미국과 EU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한 절충안을 제시하여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2002년 농업법에서 새롭게 도입한 경기변동에 따른 직접보조금(일명 CCP: Counter-Cyclical Payments)의 감축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협상에서 수세에 몰렸다. 그러나 지난 10월 10일에 스위스 쥐리히에서 열린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과감한 국내보조감축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시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EU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협상의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과거의 제안보다 더 진전된 형태의 국내보조 감축과 관세감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관세감축부분은 여전히 수출국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협상 분위기 전체를 되돌리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율관세, 60% 이상 감축될 듯

그간의 협상에서 제시된 주요국의 제안서

를 보면, 미국은 관세 구간을 1~20%, 21~40%, 41~60%, 61% 이상의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평균 60%, 70%, 80%, 90%의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제시하였다. 특히 관세 상한을 75%로 설정하여 향후 75% 이상의 관세가 없어지도록 가장 급진적인 시장 개방 제안을 하고 있다.

반면 EU는 1~30%, 31~60%, 61~90%, 91%이상의 4개 관세구간을 제시하고 각각 35, 45, 50, 60%의 관세감축을 적용하지는 입장이다(단, 개도국은 1~40%, 40~80%, 81~130%, 131% 이상으로 나누고 25-30-35-40% 관세감축률 적용). 그러나 EU도 관세 상한을 설정하여 선진국은 100%, 개도국은 150% 이상의 관세율을 가진 품목은 모두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선진국 및 개도국간 관세감축률

구분	미국	EU	G20
선진국	1-20% : 60% 감축 21-40% : 70% 감축 41-60% : 80% 감축 61% 이상 : 90% 감축	1-30% : 35% 감축 31-60% : 45% 감축 61-90% : 50% 감축 91% 이상 : 60% 감축	1-20% : 45% 감축 21-50% : 55% 감축 51-70% : 65% 감축 71% 이상 : 75% 감축
개도국	미언급	1-30% : 25% 감축 31-80% : 30% 감축 81-130% : 35% 감축 131% 이상 : 40% 감축	좌동
관세상한	75%	선진국 100% 개도국 150%	좌동
민감품목	전체의 1%	전체의 8% 이내	전체의 1% 이내

DDA농업협상, 어떻게 돼 가나?

상한선까지 감축하도록 하였다.

브라질, 인도가 중심인 수출개도국 그룹인 G20은 관세구간을 1~20%, 21~50%, 51~75%, 75% 이상의 네 개로 나누고 각각 45, 55, 65, 75%의 감축률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단, 개도국은 1~30%, 31~80%, 81~130%, 131% 이상의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관세감축률은 25, 30, 35, 40%임). 또한 EU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은 100%, 개도국은 150%의 관세 상한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관세감축의 혜택을 받는 민감품목의 개수에 대해서 미국과 G20은 농산물 전체 세번의 1% 이내로 제한하되, 민감품목의 관세 감축은 일반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 감축률의 50~70%를 적용하고, 아울러 저율관세수입쿼터(TRQ)도 상당히 증가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EU는 민감품목의 개수로 전체 농산물의 최대 8%를 제시하고 있으며 민감품목의 관세감축은 일반품목 관세감축률의 1/3~2/3 수준으로 하되 대신 TRQ는 관세수준별로 5~32%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내보조에서는 미국이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EU와 일본이 83%를 감축하고 미국은 60%, 나머지 국가는 37% 감축을 제시한 반면 EU는 자신은 70%를 감축할 용의가 있으며, 미국은 60% 이상을 그리고 나머지 국가도 50%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EU는 미국이 약점인 최소허용보조의 기준을 지금보다 80% 낮출 것을 제시하고 있어 미국의 50% 인하 보다 강력한 입장이며, 무엇보다도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블루박스

보조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협상국의 제안서를 보면, 4개의 관세구간과 선형감축에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이 반대하고 있는 관세 상한의 설정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관세감축폭에 대해서, 특히 최상위 관세구간에 적용될 감축폭에 대해서 미국과 EU는 60%와 90%로 입장차이가 크며, G20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75%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민감품목의 수에 대해서도 여전히 입장차이가 커 미국과 G20은 전체의 1% 이내인데 반해 EU는 최대 8% 입장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의견 절충이 필요한 부분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국내보조에서는 감축보조 감축률의 차이가 70~83%로 주요국간 입장차이가 크지 않으나 최소허용보조와 새로운 블루박스 보조에 대해서는 미국과 EU가 이견이 벌어져 있다.

11월 하순경, 세부원칙 초안 나올 전망

앞으로의 협상 일정을 보면 11월 7~8일 양일에 걸쳐 소규모 각료회의 및 주요 5개국 회의가 열릴 예정에 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주요 5개국은 최종 타협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종합하여 늦어도 11월 25일까지는 홍콩 각료회의에 상정될 세부원칙이 초안이 배포될 것으로 보이며, 12월 13일에 시작되는 홍콩 각료회의에서 각국의 각료들은 이 초안에 기초하여 최종 정치적 절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업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개도국 그룹인 G20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합의결과도 앞에서 거론된 수치들과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지는 않다. 그나마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EU 마저 60%의 관세감축과 함께 수출국들이 주장해 왔던 관세상한 마저 수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속한 수입국그룹인 G10은 코너에 몰려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감 품목 혜택 크지 않을 듯

농업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농업은 10여개 남짓한 핵심 품목이 전체 농업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 품목 집중형 생산구조를 띠고 있다. 문제는 이들 핵심 품목중 일부는 관세가 140~400%에 속해 있는 고율관세 품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50% 관세감축만 적용된다고 해도 주요 품목의 관세는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진다.

다행히 이러한 급진적 관세감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일정한 융통성을 인정해 주는 민감품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민감품목의 수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한다. 또한 민감품목의 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선정된 민감품목의 관세 감축폭이 보다 중요하다.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어도 일반 품목에 비해 관세감축 혜택이 크지 않다면 민감품목으로 선정한 의미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

이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우리나라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대로 민감품목이 되어도 관세감축의 혜택이 크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민감품목이 되어도 관세감축의 혜택은 우리의 당초 기대수준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개도국의 특별품목일 것으로 판단된다. 민감품목은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에게 해당하지만 특별품목은 개도국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 품목으로 아직까지는 시장개방의 상당한 예외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 수가 매우 작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야말로 1~2개 정도). 결국 지난 우루과이라운드나 현재의 도하개발아젠더나 농업부문의 개방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가 관건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도하개발아젠더 농업협상은 사실상 앞으로 11월 중순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신임 사무총장인 라미(Lamy)도 2006년말 DDA 타결을 목표로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DDA 전체의 2/3 해결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정치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한 달여 남짓한 기간동안 각국은 저마다의 이익을 세부원칙에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협상력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최종 세부원칙에 우리의 이해를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주요국들의 움직임과 막후 접촉 결과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협상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신속적 협상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Y